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방안

정동호 부연구위원

공공투자사업 관리 강화는 연구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

- 1999년 중앙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201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2014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2015년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 제도 신설
- 제도 변화의 핵심은 타당성조사를 사업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리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관리부처는 연구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적극 활용한다는 점임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세부사업 참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기관을 중심으로 관리부처가 훈령이나 고시로 지정하며, 현재는 4개 제도에 6개 기관이 복수로 지정되어 상호 연계의 필요성이 높아짐
- 외부 전문기관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에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지침 연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의 확대에 의해 제도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해짐

- 타당성조사 제도 간 대상 및 면제 요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
-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정보가 의사결정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역할 범위를 설정하고, 전문성 강화 및 경쟁체제 도입으로 지정된 복수의 전문기관 간 역할 배분 문제가 대두
- 다수의 전문기관 참여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고도화 및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실제 현장에서 전문기관 간 연계는 필요 시 개별적·일회성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 영국은 정부에 속한 주요 경제학자 그룹에서 부처와 공공기관의 개별 가이드 내용이 상위 가이드와 부합하는지를 검토
- 일본은 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사업평가방법연구위원회에서 주요 방법론의 변경사항과 가이드 간 정합성을 검토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 (조직)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구성하고 필요 시 관리부처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학계, 엔지니어링업체와 협업
- (기능) 타당성조사 플랫폼으로서 제도 개선 연구, 조사방법론 개선 연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변경 및 지침 개정 등이 발생할 때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운영) 정기협의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영국, 일본과 같이 정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
- (기대효과) 공공투자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쟁점사항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분석방법론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

01 전문기관을 활용한 타당성조사의 확대

관리부처 주도의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는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 1999년 중앙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이하 예타)가 도입된 이후 외부 전문기관(국책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타당성조사 확대
 -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은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선정, 집행, 운영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
 - 1998년에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19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타 제도를 신설(한국개발연구원 2023, 11)
 - 예타 도입 이전에도 타당성조사는 수행되었으나 도입 이후 타당성조사를 주도하는 부처가 사업부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리부처로 변경
 - 관리부처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관리부처의 감독하에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독립적·객관적·전문적으로 수행
- 중앙정부에서 중앙공공기관, 지방정부, 지방공기업의 재원까지 타당성조사 확대
 - 2011년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주도의 예타를 도입
 -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조사 시행
 - 2015년 12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함
 - 중앙정부 사업은 타당성조사 의뢰 주체가 관리부처인 반면 나머지는 사업추진 주체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관리부처가 지정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타당성조사라는 측면에서 동일

〈표 1〉 사업계획 단계에서 타당성조사 도입 및 수행 현황

사업추진 주체	중앙정부	중앙공공기관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제도 명칭	예타	예타	타당성조사	타당성검토
도입시기	1999년	2011년	2014년	2015년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3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대상	총사업비 500억 원 & 국가부담분 300억 원 이상	총사업비 2,000억 원 & 국가 및 공공기관 부담분 1,000억 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총사업비 시·도 500억 원, 시·군·구 300억 원 이상
타당성조사 관리 주체 및 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의뢰 주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 수행 전문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평가항목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정책성, 수익성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

- 관리부처 주도의 타당성조사는 대상 사업의 유형이 넓어지고 집행단계까지 확대
 - 중앙정부 예타 대상은 초기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서 2007년 정보화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2010년에는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등 기타 재정사업으로 확대
 - 사업 집행단계에서는 2003년 중앙정부 사업에 타당성재조사 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중앙공공기관과 지방정부 사업도 순차적으로 타당성재조사 제도를 마련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확대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확대로 연결되며, 전문기관의 지원 기능은 타당성조사 수행부터 종합평가 도출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 관련 법률에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전문기관은 세부사업 참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기관을 중심으로 부처의 훈령이나 고시로 지정
 -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예타는 최초 운용지침에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을 조사 수행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후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지정
 - 행정안전부는 고시를 통해 지방정부 사업 타당성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분석센터),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증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최초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후 3년마다 갱신
 - 관리부처가 지정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체계는 독립성과 전문성, 일관성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Kessides 2004; Kim, Fallov and Groom 2020)
- 타당성조사에 대한 수요 증가와 사업유형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방침에 따라 타당성조사 수행 전문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
 - 공공기관의 자원개발사업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기술성 검토를 담당하도록 함
 - 중앙정부 예타는 2019년에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
 - 지방재정 타당성검토 전문기관도 2022년부터는 기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로 지정하여 복수 형태로 운영
- 전문기관은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타당성조사의 수행에서부터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까지 담당하고 시기에 따라 역할이 변화
 - 중앙정부 예타는 2001년부터 전문기관이 담당하다가 2019년 제도 개편을 통해 전문기관은 조사만 수행하고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

〈표 2〉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현재 역할

사업추진 주체	중앙정부	중앙공공기관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 제도 및 지침 연구	○	○	○	○
타당성조사 수행	○	○	○	○
종합평가 수행	△	○	×	×

주: 중앙정부 예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종합평가를 수행하나 일부 연구진이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로 판단.

- 공공기관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현재까지 전문기관이 타당성조사와 종합평가를 모두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는 도입 시부터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02 전문기관 중심의 타당성조사 확대에 따른 이슈

공공투자사업 관리의 제도 간 연계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중앙정부나 중앙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중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기업이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
 - 지방정부 타당성조사는 2014년 제도 도입 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받은 사업을 제외한 이후,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예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
 -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는 2019년 12월 「지방공기업법」에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 따른 조사·심사를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은 포괄적으로 제외한다고 명시
 - 지방정부 타당성조사는 타 제도와 연관된 면제 대상을 법령에서 선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포괄적으로 제시한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와 차이 발생
 -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예타 등을 받은 사업은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음
- 제도 간 연계 필요성은 높아지는데 반해 협의는 개별적으로 진행
 - 시기적으로 볼 때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제도 간 중복 해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후 운영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지고 있음
 - 중앙정부 및 중앙공공기관 타당성조사의 경우 관리부처가 기획재정부인 반면 지방재정과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제도를 관장하고 있어 상호 연계 및 협의가 중요
- OECD(2023)는 효율적인 공공투자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된 협조체계,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
 - 타당성조사의 대상과 면제요건의 상호 연계, 각 제도에서 관리가 필요한 대상사업의 사업비 규모 등은 함께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주제임
 - Kim(2019)에서와 같이 정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투자사업, 지방정부의 참여 수준에 따른 다양한 사업유형¹⁾의 차별적 관리방안 등도 협의가 필요

〈그림 1〉 우리나라 타당성조사 평가지침 현황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총괄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전문기관	전문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부문별 지침 (도로철도, 문화관광, 정보화, 수자원, 의료, 공항, 항만, 개발사업, 산업단지 등)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해외사업 지침 등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부문별 지침(산업단지, 문화체육관광, 주거사업, 도로교통) 공공청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관한 지침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일반지침 연구

1 중앙정부가 계획 및 집행하고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업,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지방정부가 집행 및 운영하는 사업, 중앙정부가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정부가 계획, 집행 및 운영하는 사업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전문기관의 역할 범위 및 복수 전문기관 간 적절한 역할 배분

- 전문기관 중심의 타당성조사 수행은 타당성조사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
 - 전문기관은 기관 책임하에 타당성조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
 - 독립성,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사결정 주체에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고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 제고
 - 타당성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사업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역할 범위
 - 전문기관의 종합평가 수행은 조사와 평가의 일관성 확보, 전문가적 판단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기관이 정책 결정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 및 투자심사는 타당성조사 수행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검토한 연구진의 의견이 사업추진 여부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낮췄다는 시각도 존재
 - 외국의 경우 대부분 의사결정은 내각, 부처 협의회, 국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 의한 검토결과는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간접적인 영향만 미침(Volden, Samset 2017)
 - 전문기관의 역할범위를 결정할 때 많은 노력이 투입된 타당성조사의 결과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전문성 강화 및 경쟁체제 도입으로 지정된 복수 전문기관 간 역할 분담 필요
 - 중앙정부 예타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금까지 수행한 사업유형을 보면 정보화, 건축, 기타재정, 도로, 철도, 상하수도, 의료, 문화관광, 청사, 클러스터 등 다양하게 나타남
 - 지방정부 타당성조사의 경우 후발주자인 지방재정공제회는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청사 신축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조사를 수행하도록 사업을 배정
 - 경쟁체제 도입 관점에서 보면 한 기관의 독점적 지위는 사라졌으나 후발 전문기관들의 수행실적 및 인력 구성을 볼 때 기존 전문기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을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업유형별 배분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경쟁체제 도입은 일정 부분 trade-off 관계가 있으므로 복수의 전문기관 간 체계적인 역할 배분이 필요

정보와 지식의 공유, 분석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간 구조적 협조체계 구축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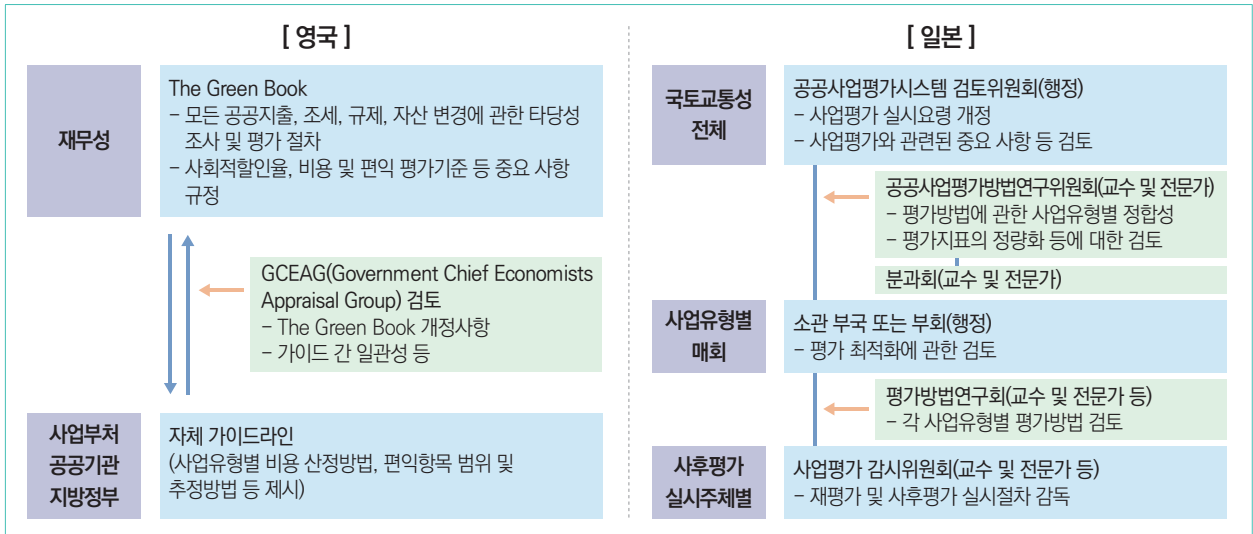
-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타당성조사는 전문기관 간 구조적 연계가 필요함을 보여줌
 -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제도 안에서는 관리부처와 전문기관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관리부처 사이의 연결고리는 강하지 않음
 -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평가항목이 경제성, 정책성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유사하다는 점은 타당성조사 제도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줌(<표 1> 참조)
 - 전문기관 안에서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나 전문기관들 사이에는 필요에 따라 개별적·일회성으로 연계가 이뤄지고 있어 전문기관 간 구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

- 다수의 전문기관이 유사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현재 체계에서 타당성조사 방법론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현재 타당성조사 분류기준은 재원부담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총사업비가 동일한 사업이더라도 국비, 지방비 등 재원 분담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종류 및 수행 전문기관에 차이
 - 도로,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복합 개발, 문화·관광시설 건축, 청사 신축 등 동일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다수의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
 - 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문기관이 타당성조사에 참여함에 따라 유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론이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
 - 타당성조사의 목적, 주체, 시기, 중요도가 다르므로 일관성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으나 유사한 사업의 경우 큰 틀에서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타당성조사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공동 대응이 필요
 - 중앙정부 예타를 중심으로 보면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예타 대상, 면제사업 조건, 의사결정체계, 평가항목의 비중 및 평가 방법론 등이 지속적으로 개편
 - 방법론 측면에서도 안전·환경, 삶의 질과 관련된 편익항목 반영 요구, 각종 재생사업의 편익산정 방식, 정책성 평가항목의 실효성 제고, 적절한 지역균형발전 평가방식 등이 이슈
 - 이와 같은 요구는 모든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인 동시에 전문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상호 연계를 통한 대응이 필요

03 영국 및 일본 사례

- 영국은 재무부 주도하에 타당성조사 가이드인 The Green Book을 작성하며 Government Chief Economists Appraisal Group(GCEAG)에서 주요 사항을 검토(Her Majesty's Treasury 2022)
 - The Green Book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및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지역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재원의 투자사업에도 사용
 - 정부 소속의 주요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GCEAG는 The Green Book의 개정사항과 부처의 가이드 변경사항이 The Green Book과 정합성을 확보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
 - 사업부처 및 공공기관의 내부 가이드가 다른 기관의 가이드에 영향을 주거나 방법론상 중요한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재무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The Green Book이 개정될 경우 다른 기관들은 이에 맞춰 가이드를 변경해야 하며, 사업부처의 내부 가이드 변경 시 재무부와 협의 및 검토를 거침
- 일본은 사업부처인 국토교통성 주도로 타당성조사 가이드를 작성하며 이때 외부의 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사업평가방법연구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침
 - 일본은 재무성이 아닌 국토교통성이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예산 반영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관련 가이드를 국토교통성에서 작성
 - 공공사업평가방법연구위원회는 사회적 할인율 조정, 화폐화가 어려운 효과의 평가, 사후평가의 결과 활용 등 타당성조사 방법론과 관련된 이슈와 사업유형별 가이드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논의
 - 평가방법연구회 또한 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국토교통성의 부·국별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유형별 가이드의 비용 및 편익분석 방법론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

〈그림 2〉 해외의 타당성조사 방법론 관리체계



자료: 영국은 저자 작성, 일본은 https://www.mlit.go.jp/tec/hyouka/public/09_public_10.html(2024년 2월 14일 검색)을 번역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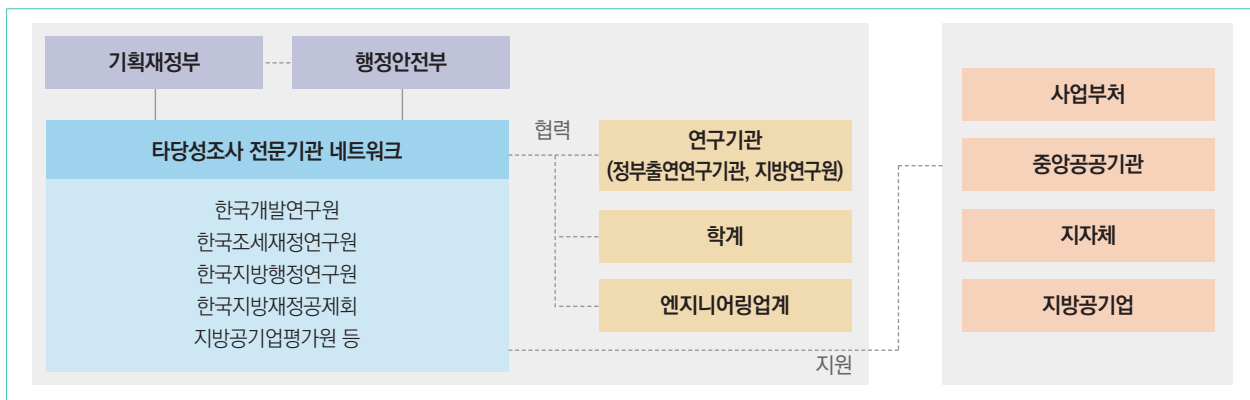
- 외국의 경우 타당성조사 시 일관된 평가방법론 적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별도의 체계가 아직 없음
 - 사회적 할인율, 분석기간, 비용 및 편익의 개념 등 타당성조사의 핵심 기준을 가이드로 규정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 및 공공기관의 자체 가이드에서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별도의 전문가 중심 조직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타당성조사 방법론과 관련된 핵심 사항을 논의하고 사업유형별 방법론의 일관성을 검토
 - 우리나라는 예타 총괄지침의 사회적 할인율, 분석기간, 경제적 비용과 편익의 개념 등을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당성조사 제도에서 사용
 - 사업유형별 세부적인 평가방법론은 개별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작성하나 평가방법론 간 정합성 검토를 위한 별도의 체계는 없음

04 정책제언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협의체(가칭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 (조직)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때 참여
 - 다양한 유형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아 제도 간 비교가 가능한 학계와 엔지니어링업계 전문가 등이 협업
 - (기능) 제도 변경, 지침 개정 및 가이드라인 배포 전 네트워크 내 관련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세미나 및 포럼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담당
 - 제도개선 연구(대상·면제사업의 기준 및 제도 간 연계, 평가체계, 복수기관 역할 분담 등), 조사 방법론 개선을 위한 연구(사회적 할인율, 분석기간, 사업유형별 비용 및 편익 산정방식 등)를 공동으로 수행

- (운영) 정기협의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해외와 같이 정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향 고려
 - 정기협의회는 반기마다 관리부처와 전체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정례협의체로 평가체계 및 방법론 관련 주요 이슈, 공동연구 결과 등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운영
 - 실무협의회는 전문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의 쟁점, 방법론 개선 필요사항, 공동 대응 필요 연구를 실질적으로 담당
 - 장기적으로는 해외 사례와 같이 타당성조사 방법론 개정내용 및 가이드 간 일관성을 검토하는 관리부처 산하의 별도 전문가 네트워크로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는 플랫폼으로서 공공투자사업 관리제도의 정합성과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동시다발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쟁점 사항에 공동으로 대응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 분석방법론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

〈그림 3〉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성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9.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4월 3일. 보도자료.
 지방공기업평가원. 2023. 2022년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차보고서. 서울 :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개발연구원. 2023. 2022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3. 2022 지방투자분석센터 연차보고서. 서울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2022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 원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2020.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id=BBSMSTR_000000000062&nttid=79912 (2024년 2월 1일 검색).
 _____. 202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https://limac.krila.re.kr/instruction/manual/13?keyword=&page=1> (2024년 1월 4일 검색).
 国土交通省. 公共事業評価手法研究委員会 (学識経験者). https://www.mlit.go.jp/tec/hyouka/public/09_public_10.html (2024년 2월 14일 검색).
 Her Majesty's Treasury. 2022. The Green Book: Central Government Guidance on Appraisal and Evaluation(2022 Edition).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23d99f5e90e075f14254676/Green_Book_2022.pdf (2024년 2월 13일 검색).
 Kessides, I. N. 2004. *Reforming infrastructure: Privatization, regulation, and competition*. Washington D.C. : World Bank Publications.
 Kim, J. H. 2019.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Reference Guide. In *Proceedings of Conference on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for Decades to Come*. December 16-17. Seoul: Conrad.
 Kim, J. H., Fallov, J. A. and Groom, S. 2020.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reference guide*. Washington D.C. : World Bank Publications.
 OECD. 2023.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Effective Public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 Paris : OECD.
 Volden, G. H. and Samset, K. 2017. Governance of major public investment projects: Principles and practices in six countries. *Project Management Journal* 48, no.3: 90-108.